

# “출산에 의한 경력 단절 막아야”

### 전북연구원 “주출산 연령인구 부족, 전국 최하위 저출생 기록 원인 출산 전후 배우자 휴가 보장 등 ‘출산·육아 친화정책 마련 중요’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하위 합계 출생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주출산연령인 30~34세의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높은 미혼율과 기혼 여성의 무자녀 비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도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출산에 의한 경력 단절을 막아야 하며, 출산 전후 배우자 휴가 보장 등 ‘출산·육아 친화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22일 ‘합계출산율로 보는 전북자치도의 저출생 요인과 반동을 위한 과제’라는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합계 출산율 경향과 합계출산율 저하 요인 등을 분석한 뒤, 합계출산율 반동을 위한 대응 과제를 제시했다.

전북연구원은 이 연구를 통해 합계 출산율 저하 요인을 5가지로 추출했다. 가장 먼저 만혼화로 인한 초혼 연령과 출산연령 증가 및 가입기간 감소를 꼽았다. 이어 가입연령(15~49세) 여성인구 규모가 유사한 타 시도에 비해 30~34세 인구가 낮은 반면 미혼율은 높다는 점도 밝혀 냈다. 세 번째는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이 20대 후반과 30대에서 급격히 낮아져 광역도 단위에서 가장 저조하고 오히려 30대 후반의 출산율 증가폭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25~29세 기혼 여성의 무자녀 비율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30~34세 기혼여성 무자녀 비율 증가세도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첫째아이 낳는 비중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둘째와 셋째이상의 출생이 비중은 크게 감소하고 있는 특징도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연구원은 주출산연령(30~34세) 인구 부족과 높은 미혼율, 기혼 여성 무자녀 비율 상승 등에 따른 출산율 하락과 출산 지연 등이 전북자치도의 출생율을 하라시키는 요인으로 압축했다.

대안으로 합계출생율 반동을 위한 다섯 가지 처방을 제시했다. 합계출산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2000대 청년 여성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전북 만들기 위한 정책 발굴이 필요하며, 가입연령 여성의 결혼 장려 분위기 조성 및 출산율 증가폭을 위한 핀셋 결혼지원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추가 출산 유도를 위한 다자녀가구 지

원정책의 차별화와 2030 우수 외국인력 유입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주출산연령대인 30~34세 여성들이 출산에 의한 경력 단절 및 직장 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출산 전후 휴가 제도를 비롯해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후 직장 복귀, 육아휴직 및 육아시간 보장대책 등을 강제하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책임자인 이주연박사는 “합계출생율은 인구변화를 나타내는 지표여서 국가 단위 비교나 전국 차원의 변화를 논할 때는 적절하나, 지방자치단체간 비교와 저출생 정책 방향 및 대응 수준을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전북자치도가 전국에서 가장 출산·육아 친화적인 지역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 정책들이 신속하게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의 지난해 합계출생율은 0.78명으로 2018년 1.1명 대 이하로 떨어지면서 6년째 광역도 단위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낮다. /이만호 기자

## “0.5% 위한 금투세 폐지 완화가 민생?... 이해 못해”

### 김종인 전 상임고문 “어려운 사람 쟁겨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재인 김종인 전 개혁신당 상임고문이 2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가지고 민생 관련 법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해를 못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이면 25%) 과세하는 제도다. 과세 대상이 고소득을 올린 0.5% 밖에 되지 않는 금투세를 가지고 여당과 야당 대표가 민생 의제로 거론하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김종인 전 상임고문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금투세를 도입하는 취지가 무엇인가. 금융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여유 있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 아니겠나”면서 “금투세 때문에 증권 시세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번 총선 뒤에 말든 민생, 민생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가 민생인지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챙겨주느냐가 실질적으로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강조한 ‘먹사니즘’을 거론하며 “기본 사회나 기본 소득이니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 금투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이해가 안 된다”며 “금투세는 먹고 사는 것과 관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금투세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드는 것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기로 되었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되나. 한 0.5% 밖에 안 될 것”이라며 “그게 마치 민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처럼 양쪽 당에서 얘기한다는 자체가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금투세 폐지 목소리가 높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금투세를 폐지하지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며 “솔직히 증권 투자하는 사람들이나 관심을 갖는 것이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솔직하지 못하니 그런 식으로 하는데 국민이 그렇게 우둔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번 미국 증권시장에 변동이 왔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상당히 빠지니까 그게 마치 금투세 때문에 빠진 것처럼 명분을 붙여가지고 ‘금투세를 좀 빨리 없애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나는 납득을 못 하겠다”며 “세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붙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니냐”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도 ‘금투세 폐지’를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금투세 완화 필요성을 밝혔다. 다만 당내에서는 법이 통과된 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이 대표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뉴스1



핵 오염수 해양투기 1년 기자회견.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회원들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 의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1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신영대 의원 경선 도운 군산체육회 관계자 구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의 선거 운동을 도운 군산시체육회 관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2일 서울북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군산시체육회 전 사무국장 A씨를 전담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신 의원의 선거 운동을 도운 A씨는 휴대전화 약 100대를 경선 여론조사 응답용으로 개통하고,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1

## 농어업 지방세 감면제도 안정적 추진 도모

### 민주 윤준병 의원, ‘농림·해양 지방세 감면 지속법’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2일, 올해로 지원이 만료되는 농어업과 농어촌·해운항만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농림·해양 지방세 감면 지속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과 귀농인,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해운항만 지원을 위한 지방세감면제도를 실시하며, 안정적인 생활환경과 제도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관련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어업인이 영농·영림·가축사육·양식·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본 및 종업원본 감면, △농어촌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노후생활 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의 조항들은 농어업의 영농활동 지원과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해운항만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로서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연안화물선 및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천연가스 연료로 사용하는 연안화물선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조항은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정들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방세감면제도는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지원됨에 따라 일몰기



한(유효기간)이 단기간에 도래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림축산·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지방세감면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 추진될 수 있도록 2024년 12월 31일로 지원이 종료되는 감면조항들을 5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농림축산어업인과 영농활동 지원과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사업 및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세감면 제도는 그 취지와 효과가 분명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세감면제도는 그 일몰기한이 너무 단기간에 도래하고 있어 안정적인 지원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발생시키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부자들에게는 감세하면서 정작 서민들에게는 건전재정이라는 미명 하에 미룬 수년까지 짜내는 윤석열 정권이 농어민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지방세감면제도까지 위협해서는 안된다”며 “농림·해양 지방세 감면 지속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정음=김대환 기자

## 민주 “검찰, 김건희 명품백 면죄부 위해 총장도 패싱”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지은 데 대해 “검찰이 결국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바쳤다”며 “검찰의 공식 판단이 아니라 대통령 수사 검사들의 반란이라 할 만하다”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을 내고 “김건희 면죄부를 기어이 만들어낸 이들은 검찰총장도 패싱 했다”며 “지난달 총장 지시와 달리 김 여사 황제 출장조사를 감행하더니 진상 파악 지시까지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 몰래 출장조사를 하고 사후보고를 했던 일도 덮여버렸다”며 “총장 지시를 받은 검찰부는 한 달 넘도록 면담 등의 기초 조사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사건번호조차 부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노 원내대변인은 “어느 조직도 이렇게 대놓고 수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반기를 들지 않는다”며 “검찰 해체 주장에 검찰 스스로 힘을 실어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이라더니 살아있는 권력을 사수하는 검찰로 전락했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개최 여부가 마지막 남은 변수이지만, 대통령 부부 호위무사들에게 이미 제압당한 검찰총장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 달고는 답이 없다”며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1

시즌 II  
명화따라클래식산책

2024. 8. 22(목) 7:30pm  
**고보연**  
Vn. 임영주 Vc. 박재은 Pf. 이영신

2024. 8. 23(금) 7:30pm  
**르네 마그리트**  
Vn. 신지나 Vn. 윤복희 Vc. 김주원  
Pf. 홍진영 Vc. 최성호 최희연

2024. 9. 26(목) 7:30pm  
**김기철오락대현**  
Gt. 김재은 Per. 정승호  
Vc. 임지현 Vc. 김원주

2024. 9. 27(금) 7:30pm  
**천경자**  
Pf. 이복순 Vc. 이영진  
Vc. 조소연 Vc. 박민지

2024. 10. 24(목) 7:30pm  
**모드 루이스**  
Pf. 장소현 Ten. 나병우  
Vn. 김지수 Vc. 임선영 Pf. 이윤정

2024. 10. 25(금) 7:30pm  
**프리다 칼로**  
Vn. 박정호 Vc. 김하연 Pf. 이주용

2024. 11. 29(금) 7:30pm  
**박안나**  
Gt. 지혜 Gt. 이상욱  
Dr. 정병준 Ch. 정요준

2024. 8. 22 ~ 11. 29

문화공간 이름 ART SPACE

티켓 | 전석 22,000원

예약 | [명화따라 클래식 산책 II](#) 검색

문의 | 카카오톡 채널 "문화공간이름" ☎ 063. 223. 5323

추천·주관 | 문화공간이름

후원 | JT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전주매일신문

연주방법 | 관중참여형 | 나래코리아

본 공연은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2024년 소공연장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입니다.